

【 2016.05.10(화) 강원일보 】



SG건설 조창진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원주 봉화산 벨라 시티 아파트 시공사인 SG건설 조창진 대표(사진 가운데)가 9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 시장, 조원학 시민복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송정부·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주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조대표는 원주에서 열한 번째 회원이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원주 봉화산 벨라시티 2차 분양

29층 839가구... 쇼핑·교육시설 인접 요지

원주 향토기업인 SG건설의 '벨라시티' 아파트가 분양성공 신화에 도전장을 던졌다.

SG건설(회장 조창진)의 독자 브랜드인 '벨라시티'는 오는 20일 원주 단계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록에서 '봉화산 벨라시티 2차' 분양에 나선다.

랜드마크 중대형단지인 벨라시티 2차는 전용면적 84㎡ 419가구를 비롯해 △59㎡ 273가구를 비롯해 △74㎡ 143가구

△150㎡ 4가구 등 모두 839가구로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의 7개 동이 들어선다.

앞서 벨라시티 1차는 지난 2014년 8월 566세대 전체 물량을 완판 했으며 올 11월 입주 예정이다. 벨라시티 브랜드는 1·2차가 모두 완공될 경우 1400여 가구의 대단지로 봉화산 택지의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기대가 높다.

벨라시티 관계자는 "원주지



원주 향토기업 SG건설이 선보이는 봉화산 택지 내 '벨라시티 2차 아파트' 조감도

역 최고 주거입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봉화산택지는 단지 앞 입점예정인 SG프라자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고속·시의버

스터미널, 각 급 학교 등이 인접해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윤수용 ysy@kado.net



조창진(사진 가운데) SG건설 대표가 원주지역 11번째 아너소사이어티로 이름을 올렸다. 원주/박성준

조창진 대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조창진(65) SG건설 대표가 원주지역 11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오전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조 대표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가졌다.

조 대표는 이번 회원 가입으로

원주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게 된다.

한편 조 대표는 황성이 고향으로 1996년 섬강종합건설로 출발해 SG건설을 건설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퍼플릭골프장 벨라스톤CC와 원주 행구동 SG프라자를 운영중이다. 원주/박성준

기술형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 늘어난다

공사비의 최대 0.9%→1.4%로 확대... 유찰편 수의계약 전환 장치 마련

정부, 턴키 등 활성화 대책 설계 가중치 90%까지 상향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가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1.4%로 확대된다.

또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 상한선이 90%로 상향 조정되고,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의 설계비 보상예산은 공사비의 2%.

낙찰탈락자 수에 따라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데 탈락자당 설계보상비는 공사비의 최대 0.9%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계보상비를 최대

▶관련기사2·3면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보상비 산정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평가 방식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낙찰자 결정방법 중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고 가중치 기준방식의 경우에도 설계점수 가중치를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30~70%로 설정돼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로 상향 조정해 가격보다는 설계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는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은 일반입찰과 달리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단독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토대로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이 기초가격과 유사한 공사의 낙찰률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

'기술경쟁' 취지 살렸지만... '적정공사비 확보' 여전히 부족

업계 반응

설계·기술제안 보상 확대로 거듭된 유찰사태 완화 기대

총사업비 협의·계약심사 등 수익성 개선 방안은 아쉬워

건설업계도 반복적인 유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형입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대체로 반색하고 있다.

우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나 덤핑 수주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경쟁 유도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 및 기술제안 보상비 확대도 거듭되고 있는 유찰사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공사 규모나 공종 등에 따라 설계 부담은 제각각이지만, 적어도 공동도급사들만

답금 갈등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대비 1~3%, 토목공사는 3~5%까지의 설계비가 투입되는 만큼, 업계는 최소 그 절반 수준인 2~3% 정도의 보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4%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입찰참가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사 규모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보상 규정이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대목은 수의계약이다. 이미 수시건에 이르는 대형공사 유찰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장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입찰에 참가했던 건설사들뿐 아니라 일선 발주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지만 감사와 여론을 고려하면 수백,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인 수의계약의 절차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유찰 및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이번 활성화 대책에 다소나마 아쉬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찰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책정 및 계약 수익성 보장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나 발주기관의 계약 심사 등 공사비를 책정하는 과정을 줄이고 깎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기술 비중이 90%

봉승권기자 skbong@

"업종간 융합으로 수출 살리자"

산업부, 무역협력과 신선키... 제조·서비스업 등 공동진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업종 융합을 통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무역협력과'를 신선했다.

산업부는 9일 무역투자실 내에 무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콘텐츠·디자인·IT 등의 업종을 소비재, 제조업, 서비스업과 융합

해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수출 촉진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발굴해 '소비재 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한다.

예를 들어 가구기업과 CG·컴퓨터그래픽기업이 협력해 3D 시뮬레이션이 가

능한 온라인 가상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나이가 범부처적인 협조와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출 촉진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수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전자무역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무역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에는 공산품의 리콜명령 이행점검 강화, 에너지 비우려제도 운영,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원 업무 조정도 일부 포함됐다.

김부미기자 boomii@

단독 입찰자도 설계심의... 유찰 따른 공사지연 해소

어떤 효과 기대되나

설계보상비 현실화로
입찰 문턱 낮아지고

설계점수 가중치 상향
기술경쟁 촉진할 듯

정부가 9일 발표한 '단기(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 입찰의 높은 설계비 부담 완화, 기술경쟁 촉진, 유찰사업의 수의계약 전환 프로세스 마련에 포인트를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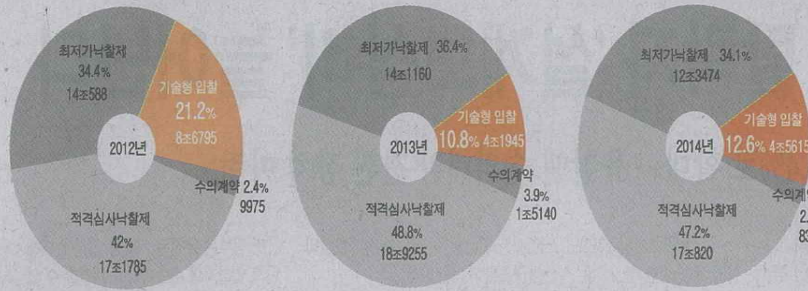
기술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선 초기 투입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득이나 막한 공사비 탓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초기 비용 부담을 떠안고 기술형 입찰에 참여했다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지금도 낙찰탈락자에 대해 설계보상비가 지급되고는 있지만 설계보상비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반입찰에 비해 높은 기술형 입찰 비용을 감안해 설계보상비를 설계·시공 분리발주 때 기본설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술형 입찰 발주 현황 (단위: 억원)



기술형 입찰 심사방법

구분	종류	낙찰자 결정방식	적용 적합공사
↑ 가격 중심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실시설계 적격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	단순 반복공사, 설계기준 명확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기술점수로 나눈 최소점수	가격 저렴하고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목적이 필요한 경우
↓ 기술 중심	가중치 기준방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설계점수 조정방식	기술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눈 최고점수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가장 높은 설계점수	최상의 시설품을 얻고자 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수준이 공사비의 1.4% 정도로 높아지면 입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보다 많은 건설사들이 기술형 입찰 시장을 노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술형 입찰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을 통한 기술경쟁 촉진도 이번 방안의 한 축이다.

특히 기술형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가운데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 조정이 눈에 띈다.

가중치 기준방식은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가중치를 각각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설계점수 가중치가 30~70%

하고서 2014년 53.1%로 치솟았다.

기술형 입찰 2건 중 1건 이상은 낙찰자를 제1선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현행 국가계약법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술형 입찰은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이 특히 시비 등을 우려해 수의계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와 가격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 입찰자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조달청이 기초가격을 작성, 발주기관이 유사 공사의 낙찰률 등을 참고해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유찰사업의 수의계약 전환으로 유찰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해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 원인은 수익성 감소와 함께 입찰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 등 기술형 입찰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설계보상비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한편 기술경쟁의 변별력은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로 설정되면서 발주기관들은 설계보다는 가격에 무게를 두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점수 가중치를 90%로 가져갈 경우 가격점수 가중치는 10%에 그쳐 가격점수로 설계점수를 뒤집는 사례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전환은 거듭된 유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지난 2012년 6.8%에 불과했던 기술형 입찰의 유찰 비중은 2013년 17.8%로 증가

세부내용은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결정

'확정가격 최상설계' 확대 목적
내년턴키 대상사업도 늘리기로

정부의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턱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중 하나인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기술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보지 않고 기술력만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후산공용 건설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2차 공구에 시범 적용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정할 때 중심위를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심위는 각 발주처에 제출한 공사를 대상으로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턱키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해 심의를 한다. 현재 중심위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턱키의 세부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중심위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턱키 낙찰자 결정방식은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가중치 기준방식 △입찰 가격 조정방식 △설계점수 조정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4가지다.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가중치 기준방식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 설

계적합 최저가 방식과 입찰가격 및 설계점수 조정방식은 기술력 위주인 턱키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를 빼곤 거의 쓰지 않는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세부설계 없이 확정가격을 산정하는 부담과 사례 부족 등으로 인해 발주처가 꺼려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국 대부분 발주처들이 익숙한 방식인 기술·가격 조합인 가중치 방식을 선호한다"며 "중심위에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까지 정해줄 때 턱키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중심위가 턱키의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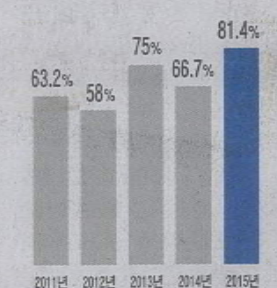
심의하려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국토부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각각 고쳐야 한다.

국토부 중심위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때 턱키 공사 비율을 차츰 높이고 있다. 2012년 입찰방법 심의에 상정된 50건 가운데 29건인 58%만 턱키 공사로 채택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81.4%로 43건 중 35건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또 기재부와 손잡고 내년에 턱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500m 이상으로 경간장 100m 이상인 특수교량, 3000m 이상 터널 등으로 정해진 중심위 심의대상 시설기준을 완화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최근 5년간 대형공사 입찰방법 '턴키' 의결 비율



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턱키에 소극적인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턱키 발주 확대를 유도하고, 내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